

‘대북규탄 결의안’ 파열음 끝 표결처리

국회, 연평도 무력도발 사죄·재발 방지 촉구 정부에 국제사회 외교적 노력 등 병행 요구도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대북 규탄 결의안은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61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이정희·권영길·곽정숙·홍희덕·강기갑) 전원을 포함해 유원일(창조한국당), 장세환(민주당),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유성열(무소속) 등 9명이 기권했고 조승수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했다.

결의안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사격 행위를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위반한 ‘무력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 침략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우리 정부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 행위에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과 조속한 피해복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식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러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로 인해 희생된 주민과 장병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함께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전날 국방위에서 처리된 결의안에 ‘한반도 긴장완화’, ‘향후

국회 평화체제 구축’ 등의 문구가 빠진 점을 문제 삼아 수정안 제출 등을 추진했으나, 진보신당 등과 추진했었으나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지 않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결의안 채택은 무리 없이 진행됐으나 표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낱선 대결이 벌어졌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에 나선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너무나 평이한 내용이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문고 싶다”면서 “폭행사건합의서에 불과한 이 결의안은 김정일과 북한군에게 우리 정부와 군을 알잡아보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기본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강경한 대응, 몇 배의 보복, 즉각적 응징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 국회가 대외기관으로서 이성적으로 규탄하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진지하게 결의안에 담아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빨갱이 같은 사람이다. 내려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뭐가 이성적이나”고 가세하면서 잠시 소란이 일었다.

투표 이후에도 정부 비판은 이어졌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변명을 해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 대결정책은 한반도를 중동처럼 화약고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영토 수호마저 어정쩡한 중도실용으로 넘어가려는 국군통수권자 이 대통령도 분명한 죄인”이라며 “청와대 병커에 들어갈 때마다 입는 전투기 조종사 같은 점퍼부터 벗어 던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내일이라도 연평도를 방문해 국민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작은 눈 크게 뜨고 보라”고 비판했다.

한 핵심당직자도 이날 “적어도 국방장관은 전투기로 적지지를 타격하라고 지시를 해야했고, 그 이후에 대

한민구 합참의장 포함... 박지원 “확전 자제 논란 문책”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해 군의 초기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나라당 일각에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경질문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용갑 당 상임고문은 2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확전 자제” 논란 자체가 이미 정상이 아니다. 만약 참모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면 규명해서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만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하지 말고,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이번 작전에 실패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을 전격 해임시켜서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핵심당직자도 이날 “적어도 국방장관은 전투기로 적지지를 타격하라고 지시를 해야했고, 그 이후에 대

통령의 확전 자제 언급이 나왔어야 했다. 정부 대처는 잘못된 것”이라면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들도 문재진 김태영 국방장관과 한민구 합참의장 등 일부 정치군인들은 이번에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홍사덕 의원은 24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의 포격 직후 대통령으로 하여금 “확전 자제”를 언급하게 한 청와대 참모와 정부 관계자들의 해임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확전 자제를 하라’고 밝혔고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배로 대응하라’고 한다”면서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니 아니니 하는 진실게임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천안함 사태에 이어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국방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발표를 부인, ‘마사지’하고 국방장관이 국민의 희생과 전쟁을 스타크래프트 게임기에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병역미필 정권이 언제까지 허울 좋은 안보를 내세울 것인지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희창 대표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은 이제 나서서 국민 앞에 담화 발표하고 또 이런 일이 생기거나 또 방비의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분위기 일신을 위해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교체하겠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묵념하는 의원들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사한 장병들과 사망한 민간인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동포단체들 ‘北 포격 규탄’ 성명 잇따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정진)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남문기)를 포함한 잇따라 재외동포단체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단은 25일 오전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긴급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 “북한의 이번 공격은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이자 남북 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배한 천인공노할 처사로서 단호히 규탄한다”

며 “정부는 북한이 발표하면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약속해놓고 정작 어떻게 대응했는지. 능장대응과 허술한 대비태세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좀더 정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대응했더라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늘의 참상과 비극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남북 평화체제를 만들어냈는데 현 정권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며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분들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말까지는 의

연평도 사태에 관한 성명을 발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군사적 대응과 북한의 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한미동맹의 강화”를 촉구했다.

미주총련은 또 미국내 모든 한인회와 협력해 연평도 사태 희생자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뉴욕 플라시 공영주차장에서 규탄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쿠웨이트 한인회는 교민들에게 “북한 사람을 만나도 경시사와 다르지 않게 태연하게 대하고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입법로비’ 의원 소환 다음주 이후로 연기

檢 “비상상황에 조사 부적절”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소환 조사 일정이 연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회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말까지는 의

원들을 부르지 않을 계획이다. 내일 부터 출석할 예정이었던 최규식의 의원 등에게 일정을 연기해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규식(민주당)·권경서(한나라당) 의원 등의 검찰 출석은 일러도 다음주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일정을 늦추고 해서 수사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의원실과 청목회 관계자 수사는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어린이 무상 예방접종 진보신당, 예산지원 촉구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25일 “광주시 예산 46억원이면 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상예방접종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06년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광주시 예산 46억원이면 무상접종이 가능한데도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능장대응·허술 대비 반성해야”

민주 ‘안보 책임론’ 제기... 여론 역풍 우려 규탄안은 협력

민주당은 25일 대북규탄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협력하는 한편, 정부의 ‘안보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북 규탄결의안에 한반도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즉각적 대화에 나설 것

을 촉구하는 내용을 넣자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북 규탄결의안의 채택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할 경우, 국론 분열 논란 등 여론의 역풍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초당적 협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천안함 사태 당시 북한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여론 악화를 초래했던 경험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북한

의 명백한 도발이 확인한 상황에서 대화를 강조하기는 부담이 된다”며 “지금은 북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해법 모색은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안보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유연한(대북) 정책을 썼던 과거 민주정부 10년간에는 이런 불상사

가 없었다”며 “정부는 북한이 발표하면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약속해놓고 정작 어떻게 대응했는지. 능장대응과 허술한 대비태세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좀더 정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대응했더라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늘의 참상과 비극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남북 평화체제를 만들어냈는데 현 정권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며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분들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롬행정고시학원 · 광주점 361-8111
전대점 268-8111

공인중개사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세위험급 교수진과 50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2월 1일 주간반 야간반
현재 전과목 강의중(청강환영)

재직자 국비지원 선착순60명

합격 올린하신다면 한 수강료, 집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롬을 선택하십시오!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점 (서구청앞) 361-8111 전대점 (전대후문앞) 268-8111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캐레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

전복구이 전문점 **전북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접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께 올릴 수 있음은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북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